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 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 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 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 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 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 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 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 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 산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 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Oltl

쟁점이 된 개정 전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 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문화 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 례를 통해 제한을 하는 것이 지나친 규 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 단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소송과정에서 법률상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 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 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이장성 기자

경기도의회, '대만 문화·스포츠 교류 기반 성장모델' 연구 착수



경기도와 대만 간 문화·산업·스포츠 교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대 만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경기도-대만 문화·산업·스포츠교류 발전 연구회'주관으로 열렸다. 해당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연구는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거점, 지역축제와 관광·산업 연계 모델 등을 분석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류 플랫폼과 산업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한 단기 교류행사가 아닌, 문화·스포츠·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 설계가핵심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문화 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인프라가 풍부하 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와 도시브랜드 가치로 확장하는 정책 기 반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 해 경기도형 교류 모델을 실질적으로 설 계하고, 청년·산업·문화가 연결되는 새 로운성장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남경순 의원, 이상원 의 원, 유형진 의원, 박상현 의원 등이 참석 하여 연구 방향 및 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싸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 원이 수행하며, 이준우 책임연구원을 중 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다.

송민수 기자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7일(금)부터 20일(목)까지 14일간의 일 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과 사회 혁신경제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 개 실·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각 기관의 주 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 현장 민원 및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 사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 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확대 등 주요 현안의 추진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원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불안 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 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 끌어내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 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워크숍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2025년 제2차 정례회의 개최를 앞두고 실무 교육 위주의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최근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에어스카이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심사 및 AI 실무 활용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는 예산안 심사 기법을 주제로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지방 재정법에 기반한 주요 지방 재정 제도 소개, 실제 사례를 통한 예산안 검토 주 안점 정리 등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교육 목표 로 삼아 생성형 AI의 최신 경향과 대표 적 생성형 AI 활용법, AI와 의정활동 접 목 사례가 소개됐으며, AI로 PPT를 제 작하는 실습 시간도 마련됐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는 성희롱,성 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및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예방 교육도 아울러 실시됐다.

송민수 기자

충남도의회 "무궁화 법적 지위 확립, 미룰 수 없는 과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 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 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 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 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 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 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 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 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 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 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 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 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 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 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 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 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 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 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 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 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전달될 예정이다.

